

2023.05.03.(수)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Fax 02-6788-3635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담당 이진희 비서관 010-3884-6062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 온라인 접수센터 운영 현황 보고- 정부여당은 특별법 제정과 지원대책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2023년 5월 3일(수) 14:5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 온라인 접수 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센터 개소 이후 일주일 사이 총 320건의 고충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중 ‘전세사기 관련 정책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57.2%에 달하는 183명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중 이용해본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법률상담’이 63%(178건)로 가장 많았고, 저리대출이 12%(34건), 긴급주거지원과 보증보험 가입이 6%(16·17건)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현재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했던 지원대책 대부분이 상담 수준에 그치며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실질적 피해구제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전수조사를 통한 명확한 피해규모 파악과 이를 반영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용하려 했으나 이용 자격이 안 됨’이 1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재 국회 국토위에서 특별법 상 피해자 요건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석은 큰 의의를 차지합니다. 정책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해당 질문에 답한 260건의 응답 중 ‘이용하려 했으나 이용 자격이 안 됨’이 136건으로 52%나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구제책의 자격요건 현실과 맞지 않게 까다로워 정작 구제가 절실한 피해자들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제시한 수정안으로 피해자 범위가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사각지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보증금 규모를 4억 5천으로 설정 시 500~1500만 원 차이로 피해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상황에 처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는 ‘어린아이와 살고 있는 주택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 산정 범위에서도 벗어나 삶이 정말 괴롭다’ 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이 대출인 점을 감안했을 때, 전세사기를 당하면 전세보증금 규모와 관계없이 삶의 위협하는 경제적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후 현재 논의 중인 안으로 특별법이 합의, 통과되더라도 이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금융 지원이나 채권 안분 같은 최소한의 구제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최근 LH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 안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우선매수 시 ‘가격상한선’을 두는 등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LH 매입임대 사업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근린생활시설을 현재 매입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접수센터에 접수된 근린생활시설에 거주하는 20건(6%)의 사례는 공공에게 우선매수권 양도라는 구제책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정부가 제시한 우선매수권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선매수권 양도를 통한 구제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LH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세심하게 접근해 실질적인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가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부터 목놓아 외치던 피해자들의 외침과 눈물을 외면해왔습니다.

피해자들과 더불어민주당이 경매중지 등 지원책을 요구하고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을 발의했을 때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은 뒤에야 미봉책을 대책이라고 내놨을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잃고 삶을 포기하려 하는 수많은 국민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에, 행정이 스스로 한계를 정하기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을 분석하고 발표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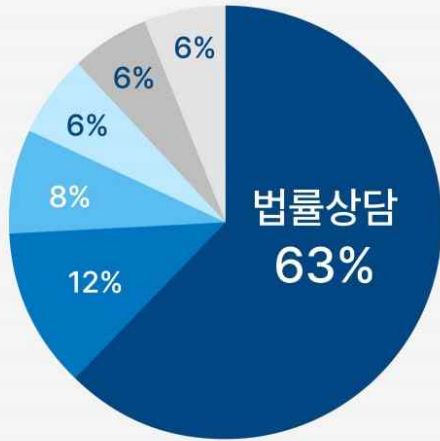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3. 5. 3. (수)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접수 센터 허종식·권지웅 센터장

## 전세사기 관련

### 어떤 정책을 이용해보셨습니까? (284개 응답, 5월1일기준)



- 법률상담 63%
- 저리대출 12%
- 보증보험 가입 8%
- 계약정보 확인 6%
- 긴급 주거지원 6%
- 기타 6% (민·형사 고소, 센터 이용 등)

- ▶ 경제적 피해구제 이용자는 정책 이용자 중 20%에 불과함
- ▶ 대부분이 법률상담으로 실질적 구제책이 아님

## 전세사기 정책을

###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60개 응답, 5월1일기준)



- 정책을 이용하려 했으나 자격이 안 됨 52%
- 어떤 정책이 있는지 알기 어려움 25%
- 정책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 부족함 13%
- 기타 10%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음 등)

- ▶ 피해구제 정책 지원 자격이 과도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절반이 넘음
- ▶ 정책 안내가 충분하지 않고,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있음